

지역사회기반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활성화 방안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

Promoting Employment in Community-based Social Service Sectors:
Focusing on Gwangju Metropolitan City, Republic of Korea

이형하*, 정성일**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광주여자대학교 콜마케팅학과**

Hyoung-Ha Lee(hhlee62@kwu.ac.kr)*, Sung-Il Chung(sichung@kwu.ac.kr)**

요약

본 연구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부문의 주요 직종인 교육 및 보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고용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수준을 제고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며, 여성 등 잠재인력의 경제활동참가를 증진하기 위한 고용창출의 원칙과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의 유관 부서간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며, 사회적 기업의 성공을 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모델적인 사회적 기업을 발굴과 홍보가 필요하다.

■ 중심어 : | 사회서비스 | 사회적 기업 | 고용활성화 |

Abstract

This paper searches for programs for creating increased employment in local society in important occupation sectors such as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insurance and social welfare services, culture and arts, housing and environmental service fields. As part of an improvement plan, while strengthening investment in education training infrastructure for the suppliers of social services,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y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s necessary. Also necessary are identifying model social enterprises that are based upon joint efforts for success of social enterprises and publicity efforts necessary.

■ keyword : | Social Services | Social Enterprises | Promoting Employment |

I.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국민소득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서비스 공급은 가족 등 비공식 부문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핵가족화의 급격한 진행, 이혼가구나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가족 간 유대가 약화되면서 가족 내에서 육아나 고령자 수발이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

지고 있으며, 그러한 노동을 주로 맡아왔던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예컨대,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과 함께 의료 및 보건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1].

전통적인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여성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1997년 대규모 경제위기 이후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등장하였다[2]. 이

러한 저소득층 임금 지원 방식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의 효과를 가져왔으나, 정부의 임금보전을 통해서만 일자리가 유지되고, 낮은 임금 수준에서 비롯되는 질 낮은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3].

그간 우리나라 공공부조체계는 소득보장 위주로 확대되어 사회서비스 발전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2006년도 보건복지 예산의 경우 건강보험 34%, 기초생계급여 28%, 의료급여 27%에 비해 보건복지서비스는 9%에 머무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사회 양극화 시대에 사회서비스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복지분야 서비스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적 지원에 치중하고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는 취약한 실정이다[4].

보건의료 분야는 민간 시장에 의한 치료 중심의 접근에 머물러 고령화·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는 사전 예방적 투자는 부진하다. 그간 급성기 질환을 치료하는 직접적 의료인력 투자에 집중하여, 요양·간병 등 간접인력에 대한 투자는 소홀했으며, 시장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방문보건·정신건강, 만성질환 관리 등 공공 보건의료 분야 투자에 대한 관심과 인식도 부족하였다[5]. 즉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고, 인적자원개발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변화에 조응하는 서비스 발굴·확충과 함께 집행 인프라 정비 및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다[6].

한편, 사회서비스 성장의 두 축은 경제적·물질적인 측면과 더불어 문화적·정신적인 욕구 충족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경제규모와 국민 삶의 질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도전 요인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행정 서비스 분야, 문화예술 분야, 환경 분야 등에서도 고용이 안정적이면서 동시에 평균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요구된다[7][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단위의 사회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과 요양보호사 분야, 지역아동센

터, 자활공동체와 사회적 기업, 여성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고용창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사회서비스의 개요

1. 사회서비스의 정의와 특징

사회서비스 분야는 산업분류에서 서비스업에 속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에 따르면 농업과 제조업이 아닌 것을 서비스업으로 정의하는데, 서비스업 내부에도 다양한 산업들이 혼재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서비스업 가운데 하나인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는 현실 속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social welfare service)라든가 대인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 human service), 또는 사회적 보호(social care)와 같은 다양한 용어와 혼용되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서비스 개념은 넓게는 공공행정, 국방,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포괄한다. 그리고 좁은 의미로는 미국에서 말하는 대인사회서비스(human service), 영국의 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처럼, 영미 계통 국가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보호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인다[9].

최근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논의과정에서 협의의 사회복지를 광의의 사회정책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10]. 사회서비스의 정의는 “사회적 보호를 비롯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개인 욕구에 대한 집합적 대처의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회복지-돌봄(care)-기초 의·식·주거보장-보건의료-교육-고용 관련 개입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정의해 볼 수 있다([표 1] 참조)[11].

이처럼 사회서비스는 개인이나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이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공동 서비스를 가리킨다. 따라서 사회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사회서비스는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개인들에게 제공하는 대인(personal) 서비스이다. 이를테면 의

료서비스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을, 보육서비스는 영유아를, 그리고 교육서비스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복지서비스의 경우 장애인이나 고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성별 고용 비중을 보면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고용 비중이 높다. 사회서비스가 신체나 정신이 취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는 점 때문에, 이 분야는 부드럽고 섬세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12].

표 1. 사회서비스 개념 규정의 사례

구분	사회서비스 개념 규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의해 제공되는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과 관련된 개별적, 전문적 서비스'로 규정
사회적 기업 육성법	'사회서비스'라 함은 교육보건의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 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보육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산림보전 및 관리 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의미
한국의 표준산업분류	'사회서비스업'을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전체와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중 일부로 분류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란 개인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 보육, 아동장애아노인 보호 등, 보건의료서비스: 간병, 간호 등, 교육서비스: 방과후 활동, 특수교육 등, 예술서비스: 도서관, 박물관 운영 등)

둘째, 사회서비스 가운데 복지서비스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노동(care work)을 시장화하고 사회화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다지 높은 숙련도와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분야도 많다. 그렇지만 사회서비스 중에서도 교육이나 의료서비스는 서비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대학 이상의 고학력이나 전문 자격증과 고도의 숙련을 요구한다. 이처럼 사회서비스 안에서도 요구되는 숙련도와 전문성에 차이가 크며, 그에 따라 임금 수준이나 고용의 안정성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셋째, 사회서비스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공공의 선택에 의하여 공급량과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사회서비스를 시장에 맡겨 둘 경우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외부효과와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가 발생할 때는 시장기구가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의 양을 적절히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어떤

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보편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보편적 견해가 범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정치적으로 힘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사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게 된다[13].

2. 사회서비스에 관한 선행연구

1990년대부터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초기 학술적인 영역에서 시작되었던 논의들이 점차 정책수립과 실천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례로 유럽사회네트워크(European Social Network)에서는 1993년부터 매년 유럽사회서비스회의(European Social Service Conference)를 개최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이후 경제적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가족구조의 변화, 인구고령화 및 저출산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현금급여 중심의 사회보장체계를 대신할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이 요구되면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연구들도 등장하고 있다. 그 간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2] 참조)[11][14].

표 2. 사회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사회서비스 전반에 관한 연구		공공부조로부터 분리하여 독자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	새로운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회정책의 대응으로서 사회서비스 확충을 주장하는 연구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서 사회서비스 확충을 주장하는 연구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에 대한 회의적 시각
		이현주 외, 2003	이봉주 외, 2006 정경희, 2006 강해규 외, 2007 박세경, 2008	노대명 외, 2005 김혜원 외, 2006 어수봉 외, 2006 최은영, 2007	최재성, 2008
사회 서비스 일 부 분야 에 관한 연구	자활 사업			한상진, 2006	
	간병 사업			정경호 외, 2006	
	교육 체계			이인재, 2006	

첫째,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연구로서 복지국가 체계발전의 단계상 우리나라도 사회서비스를 공공부조로부터 분리하여 그 기능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는 이현주 외(2003)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원리를 검토하고, 외국과 한국의 공공부조 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의 부분별 내용과 체계 분석을 통하여 향후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체계 재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새로운 위기에 따른 사회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에 의하여 사회서비스 확충을 논의하는 연구들이다(이봉주 외, 2006; 정경희, 2006; 강혜규 외, 2007; 박세경, 2008). 이봉주 외(2006)의 연구는 현재 한국의 사회서비스 확충 논의가 사회서비스를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가 하는 서비스 내용과 전달 체계에 관한 논의가 생략된 채 단순히 공급을 늘리는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논의가 주도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사회서비스 운영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의 틀을 심층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특성, 사회서비스 확충의 필요성, 외국의 사회서비스 제도화의 경향, 그리고 한국 사회서비스의 현황과 특성을 검토하고, 이에 비추어본 사회서비스 제도화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정경희 외(2006)의 연구는 사회서비스 확충과 관련한 정책적 쟁점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기능과 의의, 복지국가 유형별 서비스 전달과정 분석, 그리고 정책적 쟁점으로서 사회서비스 역할분담 즉, 시장-국가-제3섹터 간 공급주체 기능분화와 서비스 인력 및 기타 쟁점을 분석하여 한국의 사회서비스 발전 기반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방향과 중장기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강혜규 외(2007)의 연구는 이런 연구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사회서비스 중 국민적 욕구가 크고 고용창출효과 등으로 경제에 선순환효과를 미치는 핵심부문의 서비스 수요 및 공급실태를 정교하게 분석하여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재정투입 등 종합적인 사회서비스 확대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노대명 외(2005)의 연구는 사회적 일자리가 취

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자활사업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및 제도화를 탐색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여 사회서비스부문의 고용창출 잠재력과 이 일자리에 투입될 실직빈곤층의 규모를 추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취업 잠재력이 낮은 집단에 대한 고용창출 정책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점진적으로 사회서비스부문 확대와 연계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공식화하는 전략으로 사회적 기업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김혜원 외(2006)의 연구는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사회서비스부문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고용전략 차원을 견지하면서도 단순히 일자리창출의 정책방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서비스 발전 및 고용창출 잠재력을 파악하여 우리사회에서 이 부문의 고용 창출 잠재력이 약 90만 명에 달한다는 추정치를 내놓고 있다. 어봉수 외(2006)는 사회서비스부문의 일자리 창출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부문에서 창출될 일자리의 규모를 보건,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부문으로 구성하여 추정하고, 각 부문별로 제도개선, 공급체계 정비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은영(2007)의 연구는 사회서비스를 제도화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달체계,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한상진(2006)은 자활사업을 포함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빈곤이나 실업대책으로 갖는 경제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 그리고 전개과정 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들 중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형태를 구분하고, 비정부조직, 기업, 정부 등 프로그램 이해 당사자들의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정경호 외(2007)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경제적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 일자리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간병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이인재(2008)는 사회서비스 확대와 공급방식의 변화는 서비스 대상 선정, 서비스 공급기관의 확대와 품질관리, 서비스 공급인력 교육

훈련 및 관리 등과 같은 다양한 과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서비스 인력 문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전제가 된다고 본다. 따라서 그동안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 위주의 전통적 취업시장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위주의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의 흐름에서 탈피하여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 특히 근로연계복지, 지역 사회 차원의 사례관리, 교육 복지 등에 대한 비전과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넷째, 최재성(2008)은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사회서비스 제공, 전달체계의 구축 및 이를 위한 재원의 확보 등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과 공공·민간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로서 사회복지정책의 근본 성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현재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수용자 중심의 정책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예산 중심', '행정편의 중심'의 정책처럼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3. 사회서비스 공급의 현황과 문제점

2006년에는 총 6,756억 5천만원의 예산과 111,616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이 진행된 반면, 2007년에는 1조 4,441억 89백만원의 예산으로 212,514명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중에서도 2007년부터 새롭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한 분야로 여성부의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사업 1,051명, 취약계층 가족 아동 양육지원 299명, 보건복지부의 노인돌보미 바우처 5,721명, 지역복지서비스 혁신 사업 17,400명, 농림부의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지원 180명, 교육부의 방과후 학교 10,355명,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 15,000명 등으로 상당 부분이 여성이나 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수급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약 90만 명의 사회서비스 공급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사회서비스의 공급이 크게 부족한 분야는 보육(14만 명)과 간병(13만 4천 명)과 방과후 활동(19만 8천 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 9월 보건복지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준비하여 개최한 바 있는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 좋은 일자리로 선진한국 열어가겠습니다'라는 정책과제 보고회에서 제시된 자료를 보면, 한국의 사회서비스부문 고용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2006년 현재 사회서비스 공급인력 부족 규모를 80만 명으로 진단하고 있다[15].

이러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문제점으로 김혜원 등[16]과 김진옥[17]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량이다. 둘째,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서의 미약한 국가책임 수준이다. 법률상의 보편주의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수혜는 빈곤계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용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이 미약하다. 셋째, 취약한 민간 비영리부문과 편협한 국가규제이다. 비영리부문의 사회서비스 공급자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취약하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국가의 역할은 보조금지급과 감사의 역할만 할 뿐, 서비스의 질 관리, 서비스의 연계·조정 역할은 거의 발견할 수 없다. 넷째, 서비스의 책임성 문제와 소비자 선택권의 제약문제이다. 시설에 대한 직접 재정지원방식은 민간위주의 공급체계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고, 정부의 규제는 강하나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압력이 크지 않다는 고질적인 병태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사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계층 및 지역간 형평성 문제이다. 빈곤층(수급권자)은 이용료 부담 없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양질의 서비스(국공립시설)를 제공받고, 구매력이 높은 상위계층은 보육, 양로, 요양 등에 있어 영리사업자가 제공하는 고가의 고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차상위 및 서민 계층은 높은 이용료 부담과 낮은 질의 서비스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나아가, 최근 보건복지서비스의 지방이양사업이 증가하고, 포괄적 보조금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여섯째, 바우처 사업의 경우 비용지불방식이 3자 지불방식인 것으로 인해 서비스 공급자가 과잉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수요자 입장에서도 서비스를 위한 사전 기여가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 비용을 제3자가 지불하므로 남용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용 지불방식이 운영

방식이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는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통합적이고 연속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III.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1.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 현황

사회서비스 분야의 대표적인 바우처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5개구에서 3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표 3] 참조).

표 3. 사회서비스 분야 바우처사업 현황

구	사업명
동구	7개 사업
동구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EAP 서비스
동구	치매예방 C.F.R(인지기능강화)서비스
동구	노인도우미가 제공하는 맞춤형 건강한 환경지원서비스
동구	고령자 은퇴후 생애설계 서비스 제공 및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동구	다문화가정과 청각장애인 가정아동교육지원
동구	저소득 가정아동과 함께하는 행복한가정만들기 동행서비스
동구	차세대비전프로젝트 '드림나눔서비스'
서구	9개 사업
서구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질환자 가정을 위한 맞춤형 건강한 집 만들기 사업
서구	문화사각지대 아동을 위한 보충적 지원서비스 "비전트립"
서구	경계선상의 사회방치아동 정상화 프로그램
서구	노인도우미가 제공하는 맞춤형 건강한 환경지원서비스
서구	고령자 은퇴후 생애설계 서비스 제공 및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서구	다문화가정과 청각장애인 가정아동교육지원
서구	출산후 우울증 치료를 위한 엄마학교
서구	저소득한부모, 조손 및 맞벌이 가정 아동야간 및 주말보호사업
남구	10개 사업
남구	이주가정 맞춤형서비스
남구	전세대 통합 효사랑 체험지원 서비스
남구	취약계층 직장인 대상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가족지원 서비스
남구	'이제는 행복해요'
남구	'사랑해요 엄마 아빠'
남구	노인도우미가 제공하는 맞춤형 건강한 환경지원서비스
남구	고령자 은퇴후 생애설계 서비스 제공 및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남구	다문화가정과 청각장애인 가정아동교육지원
남구	효사랑약손 출동서비스(시각장애인인마서비스)
남구	아동문화, 예술교육지원 서비스
북구	8개 사업
북구	내 아이 바로 알아 부모랑 친해지기
북구	취약계층 직장인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가족지원서비스
북구	노인도우미가 제공하는 맞춤형 건강한 환경지원서비스
북구	고령자 은퇴후 생애설계 서비스 제공 및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북구	다문화가정과 청각장애인 가정아동교육지원
북구	도레미-미래의 꿈나무를 위한 음악교육 프로젝트
북구	가면놀이를 통한 가족관계 회복서비스
북구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광산구	5개사업

광산구	노인도우미가 제공하는 맞춤형 건강한 환경지원서비스
광산구	고령자 은퇴후 생애설계 서비스 제공 및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광산구	다문화가정과 청각장애인 가정아동교육지원
광산구	노인아쿠아(수중재활운동 및 유산소 헬스운동교실)
광산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 서비스
5개구	39개 사업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는 2009년 1월 현재 152개소에서 148명의 어동복지교사가 근무하고 있다([표 4] 참조).

표 4. 지역아동센터 현황

지역아동센터 센터수 152개 기관										
아동 청소년 지도 교사	보건 위생 교사	기초 학습	기초 영어	독서 지도	예능 활동	체육 활동	지역사회 복지사	강사 형제 교사	기타	계
73	7	33	18	9	6	1	0	0	1	148명

광주광역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2008년 8월 현재 25개기관으로 수용에 비해 너무 많은 기관이 난립하고 있으며, 이미 수료생이 4,000명이 초과하여 지역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상태이다([표 5] 참조).

표 5.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

연번	교육기관명
1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요양보호사교육원
2	나눔요양보호사교육원
3	엔젤요양보호사교육원
4	광명요양보호사교육원
5	광주, 전남요양보호사교육원
6	C.C.C.요양보호사교육원
7	조선대학교부설요양보호사교육원
8	한세요양보호사교육원
9	빛고을요양보호사교육원
10	광주간호학원요양보호사교육원
11	가족사랑요양보호사교육원
12	카리타스요양보호사교육원
13	한울요양보호사교육원
14	21세기요양보호사교육원
15	하누리요양보호사교육원
16	송원대학부설요양보호사교육원
17	에덴요양보호사교육원
18	중앙요양보호사교육원
19	부모사랑요양보호사교육원
20	현대요양보호사교육원
21	인애요양보호사교육원
22	양지요양보호사교육원
23	기독교간호대학부설요양보호사교육원
24	초당대학교부설요양보호사교육원
25	샘목요양보호사교육원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 광주광역시 자활공동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10월 현재 5개 구 49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표 6] 참조)

표 6. 자활공동체 현황

시군구	사업명
동구	5개 사업
집수리	주거현물급여사업
청소	입주청소, 거주청소
간병	유료간병서비스, 맞춤형 간병 등
대청마루	식당
희망자원	폐자원재활용(페트병위주)
서구	10개 사업
한결간병	전문간병인 파견
녹색환경	잡병, 폐지, 고철 등 폐자원을 재활용
푸른환경	공병 등 폐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수익 창출
빛고을집수리	주거현물급여사업
클린닥터	물탱크청소, 입주청소, 거주청소
맛사랑외식	반찬(도시락) 배달사업(사무실, 상가, 공사현장)
내리사랑산모	산모-신생아에 대한 지원 서비스
좋은나라세차	일반세차 사업, 스티머세차 사업, 실내크리닝사업
서구상무	10개 사업
명진세차장	세차장
하안세탁소	세탁소
상무세차장	세차장
파티오베이커리	제과 제빵점
금호라인화이트세탁소	세탁소
신세대미인나라미용실	미용실
해피콜린너스청소사업	청소용역
나눔간병	간병사업
빵나라분식친구	분식집
하안나라세탁소	세탁소
남구	6개 사업
세차이야기	차량 세차
크린환경	청소 사업
유니나 환경	광주남구청소년 수련관 청소담당
깨끗한세탁마을	세탁소
광고만드는사람들	프랑카드 및 홍보용전단지
북구동신	5개 사업
리필21c	페토너 수거 및 충전
두부마을	두부생산판매
다다스넥	분식가게
팡돌체베이커리	빵 생산 판매
단지와 향아리	도자기 체험 및 판매
(유)자미푸드 (사회적기업인증)	도시락 생산판매
북구일터	8개 사업
미래로 건설	주택개보수공사, 주거급여현물화사업 등
참사랑간병어머니회	유료간병서비스, 맞춤형 간병 등
광주떡명가	떡, 떡볶이, 폐백 전문점
하안나라	의류 및 가족류 세탁/수선 서비스
드림박스	포장박스 제조사업
노인돌보미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다우환경	청소대행 및 청소용역
아가마지	산모도우미
북구희망	5개 사업
희망모아	폐자원 재활용

엄마손맛김치	김치 제조 판매
고운차 카 클리닝	차량 세차 및 출장세차
희망지기	버섯 및 영농사업
아이스플라워	얼음 조각 및 장식
광산구	2개 사업
한울림동농장	방울토마토 전문 재배 판매
다솜간병공동체	병원, 가정에서의 유료전문 간병실시

2008년 10월 현재 광주광역시 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현황은 7개 사업이 인증을 완료하였다([표 7] 참조).

표 7. 사회적 기업 현황

지역	사회적 기업
광주광역시	(유)자미푸드, (사)사회적예술기업, (사)하누리 성폭력 인권센터, (사)한누리, 사회복지법인 무지개공동체 엠마우스산업, (사)시니어월드, 씨든장애인직업재활센터
전라남도	청람사회복지회, 여수YWCA돌봄지원센터, 순천YWCA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지원센터사업단, (사)여수주거복지센터(아름다운내건축)
전라북도	홍실림새벽공동체 영농조합법인, (사)사랑의손길 새소망, (주)사람과 환경, (사)전문문화사랑모임, (유)나눔푸드

한편, 광주광역시 여성인력개발기본계획(2008) 수립을 위한 조사결과, 진출하고 싶은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분석결과([표 8] 참조), 보육 및 양육시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분야가 25.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방과 후 교실보조원으로 20.4%로 응답하였다.

표 8. 진출하고 싶은 사회서비스 분야

구분	빈도	%
간병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31	5.6
노인수발 서비스	50	9.0
보육및양육시설 확충을 통한 일자리창출	138	25.0
아이돌보미 서비스 분야	35	6.3
신생아산모 도우미 서비스 분야	34	6.1
방과 후 교실보조원	113	20.4
장애인 교육보조원 및 이동지원 서비스	37	6.7
없음	97	17.5
기타	18	3.3
전체	553	100.0

2.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 문제점

2.1 바우처사업과 요양보호사

바우처 프로그램 시행 기간이 길지 않아 효과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바우처 사업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던 공급자

간 경쟁 유도, 서비스 공급부문 시장형성 등을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이와 동시에 바우처 제도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의 질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초래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고용의 안정성은 물론이고 급여의 적정성과 근무 조건 등에 대한 질적 관리가 병행되지 않으면 일자리는 있지만 여전히 빈곤한 계층을 확대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과도한 배출과 교육기관의 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의 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2.2 지역아동센터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는 152개기관이며, 2009년도 예산은 3,400억원으로 개소당 평균 22,368천원이다. 이러한 낮은 예산으로 아동들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교사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 제공, 아동들의 발달주기상의 문화체험과 현장 학습 프로그램을 시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특기적성과 관련한 교사파견이 전무한 실정이다.

2.3 자활공동체와 사회적 기업

자활공동체의 월 평균 수익금은 609만원으로 1인당 인건비는 79만4천원에 불과하다. 자활공동체에 대해 우선적 지원해야 할 사항은 '우선구매 및 우선위탁 의무화', '광고 및 홍보, 영업 등 전문적인 경영지원', '세제혜택'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선행조건으로는 '조세감면, 사회보험료 지원과 같은 재정지원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문 경영컨설팅이 지원체계가 미비하여 중장기 계획에 의한 사업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IV.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 고용활성화방안

1. 고용창출의 원칙

1.1 현장기반

광주광역시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일자릴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 기반한 사업발굴이 중요하다. 이미 2007년 12월 '광주광역시 여성인력개발기본계획(2008-2012)'에서도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사회서비스 고용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 사회서비스의 수요는 다변화되고 급증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초한 계획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사업의 발굴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18][19].

1.2 민간기관과의 다양한 네트워크 활용

사회서비스 지출 확대와 함께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와 광주광역시가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민간은 일부 보완만 하는 '대행자' 모형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어 광주광역시와 민간이 동등하게 역할을 분담하는 '이중혼합' 모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복지수요자와 민간부문의 자발적 서비스 공급가능자를 연계시켜 줄 수 있는 네트워킹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서 민간 서비스 공급의 자율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자발적인 복지서비스 공급확대를 위한 세제혜택, 인프라 구축 등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민간기업·지역자활센터·광주시청과 5개 구청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펼쳐야 한다.

1.3 자활공동체 수입 증가

광주지역 자활공동체는 49개이다. 지난 2-3년 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자활공동체로 전환, 창업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자활공동체로 전환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자활공동체가 조기에 사업을 정착하고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관심이 지속되어야 한다. 예

를 들면, 광고·홍보·영업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경영 지원, 한시적 인건비 지원기간의 연장, 우선구매 및 우선위탁 의무화, 생산기술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창업과 사업자금의 융자지원 확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1.4 사회적 기업 육성에 정책적 고려

다른 광역시도의 경우 전통문화모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문화학교운영, 생명농업 등의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이 창업되어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제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역자활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시설 및 공간의 무상사용, 지역 기업가들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적 후원 방안 등의 다각적인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지역의 유관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 기술지원과 경영컨설팅, 판매지원 등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분야별 고용창출의 방향

2.1 지역아동센터와 보육서비스 분야

지역아동센터 대부분은 운영 실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으며, 따라서 별도의 전문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다. 기본적으로 실무 인력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분야별 교사과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아동센터는 빈곤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장소이므로 이용 아동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성별 정규훈련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방과후 학교교사는 초등학교 아동에 적절한 자격이 요구된다. 아동복지지도사 또는 방과후 아동지도사 등 아동을 위한 별도의 자격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취업부모의 경우 일찍 문을 여는 보육시설이 많지 않으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늦게 퇴근하는 취업부모를 위한 지원책에 비해 아침 일찍 출근하는 이를 위한 지원책은 많지 않은 편이다. 또한, 영아보육시설이 부족한 것 역시 취업모의 경력단절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에 영아보육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요구된다. 최근 광주광역시

(2007)의 기업체 여성인력수요정보조사 결과에서도 보육시설에 가장 많은 추가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어 이러한 보육시간의 사각지대를 보호할 수 있는 보육교사를 원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2.2 바우처사업과 요양보호사 분야

2008년 7월부터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앞서 노인 간병·요양 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가 2008년 2월부터 본격 양성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현재 노인생활시설·계가 노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생활지도원 및 가정봉사원을 대체해 보다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은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후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의 과도한 난립과 실습기관의 부족 등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요양서비스 질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미취업한 요양보호사에 대해 산재근로자 요양지원과 외국인 근로자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지원 인력으로 일자리를 확대해 가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해 아이돌보미 전문가를 양성하여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육아와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육아부담과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켜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자 여성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돌보미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좀 더 나은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월례회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아이돌보미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분야의 경우 최근 결혼이주 여성이 증가하고 이들의 가정에서 출산한 아이와 엄마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다. 즉, 다문화가정에 파견되어 아동들의 생애주기에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조기 적응하기 위한 가정 희망교육사 제도나, 다문화가정 방문 도우미 지원제도의 제도화가 필요할 것이다.

2.3 자활공동체와 사회적 기업분야

자활공동체는 시장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참여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 특히, 시장경쟁력을 가진 유망한 아이템을 선택해야 한다. 동시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며, 공동체 리더의 경영마인드와 전문기술, 서비스 정신이 겸비된 기초위에 성공확신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의 경우는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공익성 실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중앙, 지방), 기업, 비영리 기관의 연계 성공모델의 발굴과 사회적 확산이 요구된다.

V. 결론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기반은 공공의 제공 및 관리 능력이 저급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편 민간의 역량도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서비스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자격관리제도는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훈련기관을 설치 또는 위탁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 이미 해당 분야에서 교육훈련경험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교육을 위탁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다만, 이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은 과거 교육훈련 종료 후 일자리 연계실적과 교육의 질적 부문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구축의 선결과제로서, 서비스의 책임성(품질)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품질을 표준화하고 표준가격을 설정하며, 사회복지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인증 체계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의 출발점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정적 규제 대신, 서비스 품질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독립된 평가인증기관을 설립하여 실제적인 운영을 맡도록 하는 것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 창출업무는 현재 광주광역시의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유관 부서간

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에서 유관 부서 간 업무 협력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거나 각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여 통합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부서로 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민간기업·지역자활센터·광주시청과 5개 구청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펼쳐야 한다.

셋째,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자활사업을 비롯한 많은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사업이 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사회적 기업의 성공을 위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하며, 모델적인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공전환 가능성이 높은 모델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선도적인 사회적 기업 모델을 창출하고 사회전반에 확산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지방중심의 집행은 타당하지만 서비스가 갖는 복잡성, 지역간 불평등의 가능성, 최소한의 보장 필요성 등을 감안한다면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공급방식, 서비스 제공자 관리 등 보편적인 영역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박세경, “참여정부 사회서비스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제133호, pp.33-35, 2007(11).
- [2] 안상훈, “사회서비스투자국가로의 전환논리 : 하나의 비교사회정책학적 서설”, *사회투자국가로의 전환과 사회복지노동시장*, 2006년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자료집, pp.42-45, 2006.
- [3] 이봉주, “인적자본과 불평등,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와 인적자원개발*, 2006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pp.60-65, 2006.

[4] 이현주, 강혜규, 정경희,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비교분석*, pp.12-16, 2005.

[5] 민현주, 강민정, 이상원, 문순영, 박세경, 강혜규, 김형용, 심창학, 엄기욱, 최은영,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31-34, 2007.

[6] 박능후, “비전2030 해부 - 비전과 사회보험 부문”, *한국 장기비전 2030 사회복지정책 분야 대해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자료집, pp.48-50, 2006.

[7] 김혜원, 김경희, 이주희, 최은영, *OECD 주요국의 여성고용정책 연구: 영국·캐나다·스웨덴·덴마크*, 한국노동연구원, pp.193-202, 2007.

[8]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사람입국·일자리 정책 심포지엄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 2005(8).

[9] Daly, M. and Lewis, J., “The concept of social care and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s”, *The british Journal sociology* Vol. 51, No.2, 2000.

[10] 정경희, 이현주, 박세경, 김영순, 최은영, 이윤경, 최현수, 방효정, *한국의 사회복지 서비스 쟁점 및 발전 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25-129, 2006.

[11] 강혜규, 노대명, 박세경, 강병구, 이상원, 조원일, 이병화,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연구-주요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 추계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42-144, 2007.

[12] 정향진, 정택수, 김상호, 이지진, 이숙진,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에 따른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173, 2006.

[13] 강혜규, “한국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서비스 확충의 과제”, *보건복지포럼*, 제125호, pp.6-8, 2007(3).

[14] 이영범, 남승연,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사회서비스사업과 여성인력활용*, 2008년도 한국거버넌스학회 동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211-213, 2008.

[15] 기획예산처 사회복지서비스향상기획단,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2007.

[16] 김혜원, 안상훈, 조영훈,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노동보협 연구센터, pp.120-123, 2006.

[17] 김진욱,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공사역할분담 개혁 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1집, pp.191-192,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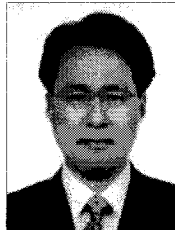
[18]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여성인력개발 기본계획(2008~2012)*, 2007(12).

[19] 광주광역시, (사)한국사회조사연구소, *기업체 여성인력수요정보조사 및 DB 구축*, 2007(12).

저 자 소 개

이 형 하(Hyoung-Ha Lee)

정회원



- 2004년 2월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 자활, 다문화, 노인복지

정 성 일(Sung-II Chung)

정회원



- 1991년 8월 : 전남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박사)
- 1996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콜마케팅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서비스, 인적자원, 콜마케팅, 대외 경제교류